

서유럽 노동운동의 위기

〈2〉

프랑스 노동조합도 다른 선진 산업국가의 노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70년 중반, 특히 80년대초 이래 노조는 수세에 놓여 있고 사회정책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수의 격감, 파업투쟁에서의 연속적인 패배, 산업구조변동 및 취업자구조의 대변동으로 야기되는 대량실업에 대한 투쟁불능 등이 프랑스 노조의 현상향을 특징짓고 있다.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는 노동총동맹(CGT)과 사회당에 가까운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에 의해 양분된 노동운동계는 두 노조세력간의 경쟁으로 그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각기 급진화되었을 뿐, 산업구조 및 취업자구조의 변동에 대응할 개별기업

떨어졌다. 노동자가 전체 임노동자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년 54%, 75년 45%, 82년 38%를 거쳐 87년 35% 선으로 하락하였다.

중공업부문 등의 급속한 축소(80년초 이래 매년 2.5%의 취업자감소)는 특히 중공업부문을

프랑스

아성으로 하는 공산당계 노조 CGT를 강타했다. 물론 첨단산업 부문이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이 부문에는 노조조직이 거의 없다. 첨단산업부문에 우글거리는 학력높은 사원들을 산업노동자 위주인 CGT는 '프티'로 경시해 왔고, 사원들은 사원들대로 CGT

고 있다. 노조에 실망한 사무직원들은 경영진쪽의 신분수정체인 '자질서클(QC)'이나 '팀 대변그룹' 등 반자율적인 생산소조에 말려들어 '유포'(프랑스의 여파)화하고 있다.

현재 사회당 소수와 정부는 과반수도 못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공산당 의원들의 말없는 측면보조로 유지되고 있는 취약정부다. 이 취약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노조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 88년 이래의 경기호조 덕택이다. 로카르 수상 정부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라크 정부가 도입한 산업현대화 및 고용촉진정책인 자본가 지원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튼 실업률은 87년 11%에서 올해초 9.2%로 하락했다.

지금만 사회당정부가 노조에 의존하기보다 노조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판국이다. 노조원의 수적 감소로 노조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 로카르 정부는 노조의 소멸을 막기

개별기업 차원 정책개발 부재

노동운동계 양분 급진화 경쟁에만 몰두 첨단산업 종사자·청년취업자 노조 외면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노동운동은 서독 노조보다 더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프랑스 노조조직률은 81년 20%에서 89년 11%로 '격감'했다. 더구나 가공스런 것은 청년취업자(18~24살)의 조직률이 2%를 밑돌고 있어서 조합원의 후진양성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산업구조 변동으로 노조의 전통적인 구호에 관심이 없고 노동 안에서 자기실현,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취업인구층이 대폭 확대된 데 반해, 산업노동자층은 인구비율상으로는 절대수에서나 크게 축소되었다. 사무직원(관리자층 및 단순 사무인력 포함)은 62년 6백36만명에서 87년 1천2백9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노동자(농업노동자 및 실업인구 포함)는 62년 7백48만명에서 75년 8백11만명의 정점에 도달한 뒤 계속 감소하여 87년 7백23만명으로

의 정책구호들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당계 CFDT는 주변부노동자와 학력높은 기술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CGT와의 경쟁과정에서 급진적이 돼 주로 특권적인 기술자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적 요소들만을 노려 왔기 때문에 증가일로의 평범한 사무직원 획득에서 CGT만큼이나 무능하다.

단순사무직원이나 급증하는 추세라면 노조원감소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겠지만, 사무·판매 분야의 '합리화'로 인해 단순사무직원은 그 절대수조차 82년 2백4만에서 87년 1백88만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기능이 높은 사무직원들은 노조가 개별기업 차원의 생산과정 조직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조들은 운동이 고양되던 20년 전이나 다름없이 주로 전국적 차원의 투쟁구호만을 되풀이하

위해 최근 임금 증 조합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로카르 정부는 개별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의 전통이 없고 기업별 정책개발이 전무한 노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82년 마련된 노동법을 관철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경영진쪽의 '자질서클'이나 '팀 대변그룹' 등의 '유포'화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용인들을 위한 '직접표현그룹(GED)'제를 도입하고 있다. 개별기업정책의 경험에 없는 노조는 이 제도가 처음에 임노동자들이 노조를 우회해 활동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으나, 실천과정에서 이 정책은 오히려 단위 노조들에 기업직원들의 정책참여를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저 노조의 지위강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지원으로 노조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황태연 통신원〉